

서울시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활동사례와 지향 방향

김 용 구(서울특별시 재활용과 과장)

1. 서 론

사람이 활동하는곳에 쓰레기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생산과정에서도 쓰레기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쓰레기 문제가 큰 관심을 끄는 사안이 아니었다. 물론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과정에서 버리게 되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

요즈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만 하더라도 남은 음식물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고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다. 입다가 버리는 의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한가?, 통계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서울시의 1,100만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가 매일 12,600톤에 이르는데 이는 2.5톤 수거차량으로 5,040대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미 지난 15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난지도에 집중매립한 결과 넓이 82만평, 높이 90여미터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 우리들의 젓줄인 한강변에 자리잡고 있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높아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대로 가면 2017년경에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내다 버리는 쓰레기도 더 이상 매립할수 없는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매립지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인식하고 단순 매립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에서 폐기물 처리정책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 기본골자는

첫째, 1회용품 사용억제, 과대포장 규제정책등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즉 폐기물 감량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둘째, 발생하는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품은 최대한 분리수거를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셋째, 그대로 남는 쓰레기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각이나 매립 처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1년까지 발생된 생활쓰레기중 재활용률(재활용의 점유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소각률은 14%, 매립률은 46%로한 중기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중에 재활용만큼 많이 알려진 것은 없을 것이다.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중점추진내용은 재활용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쓰레기 재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두가지 요소가 있다. 이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자!”하는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으로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생각하면 재활용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란 제아무리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재생하여 재생제품화 되지 못한다면 재활용가능품으로 지정하여 재활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실현가능성이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고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당위성이 있음에도 경제적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재활용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실현 가능성만을 따진다면 재활용 할수 있는 대상은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활용제품은 어차피 신제품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교가 절대적 열세에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신제품과 가격 비교를 통한 재활용 추진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재활용제품은 신제품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소각에 들어가는 모든비용, 매립에 들어가는 제경비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대로 라면 소각처리의 경우에는 소각장 건설비용, 감가상각비, 인근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용, 기타 소각에 따른 제비용을 감안하여야 하며, 매립장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100% 맞는것인지는 다소의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활용제품 생산비용을 신제품 생산가와 맞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심층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서울시에서도 '98년도 시정개발연구원 기본연구용역과제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검토도 “왕창 떠올 것” 함께 하고 있다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 중기 목표

구 분		'97	'98	'99	2001	
인 구 (천명)		10,389	10,280	10,170	10,060	
총 배 출 량		24,455	24,393	24,293	24,093	
생활 폐기물	발생전망 (환경부)	1인 발생량(kg)	1.20	1.21	1.26	1.37
		1일 발생량(톤)	12,500	12,600	12,800	13,800
	관 리 지 료 (서울시)	1인 배출량(kg)	1.22	1.21	1.20	1.19
		1일 배출량(톤)	12,662	12,600	12,500	12,300
		재활용(톤/일)	4,240	4,500	4,700	5,000
		(재활용률 %)	(33.5)	(35.7)	(37.5)	(40.0)
		시설용량(톤/일)	1,200	1,200	1,200	2,100
		소각량(톤/일)	582	580	960	1,680
		(소각률 %)	(4.6)	(4.6)	(8)	(14)
		매립(톤/일)	7,840	7,520	6,840	5,620
		(매립률 %)	(61.9)	(59.7)	(54.5)	(46)
		건 설 폐 기 물 (톤/일)		10,061	10,061	10,061
배출시설계(오니 등) (톤/일)		1,732	1,732	1,732	1,732	

2. 본 론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에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첫 째, 재생 및 재활용 처리시설의 선진기술을 B.O.T(Build Operation Transfer) 방식등으로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합작회사 설립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 째, 권역별로 재활용품 자동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재생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셋째, 재활용 및 재생사업자에게 시설개선, 기술개발 및 운전자금을 장기 저리 용자지원을 하여 육성하고,

넷째, 재생제품(재활용제품) 사용확대를 유도하여 재생산업을 활성화하며,

다섯째,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체계를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의 재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첫째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며, 둘째부터 다섯째 사항은 서울시의 「환경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98자원재활용 활성화 실천계획」과 각 자치구의 재활용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중에 있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활용품 공급확대를 위하여 4가지 부문과 수요촉진을 위한 7개 부문의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가. 공급확대 부문

(1) 대면수거(對面收去) 확대추진

주민등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나 민간수집상이 수거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이에는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 정해진 요일에 배출자가 재활용품을 문밖에 내 놓으면 주로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이 있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지역에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해 놓고 수시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해진 요일 또는 적당한 기일에 수거해 가는 거점수거 방식,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에서 정해진 요일과 시각에 정해진 지역을 환경미화원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하면서 배출주민과 직접 만나서 재활용가능품을 확인하고 수거하는 대면수거 방식이 있다

이 세가지 수거방식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적합한 체계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지역보다 비교적 수거가 어려운 단속주택지역에서의 대면수거방식도입을 자치구에 권장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대면수거가 타 수거방법보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첫째, 재활용품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양질의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수거할수 있고

둘째, 양질의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어 재생업체에 판매 또는 무상인계하기가 타 수거체계보다 효율적이며

셋째, 수거한 재활용품을 별도의 장소(집하장등)에서 재선별할 필요가 적어지므로 절감인력의 타용도 활용이 가능하고

넷째, 분리보관용기가 필요없게 되어 용기 구입비 절감, 용기설치에 따른 환경 및 위생문제의 해결등이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과 출타자등의 주민불편, 수거차량이 통행이 어려운 고지대등에서의 수거곤란등이 취약점으로 노출되어 있어 배출자에 대한 보완책(주유소, 동사무소, 노인정등에 분리수거용기의 설치등)이 강구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현재 수도권지역에 재활용 산업체(공장)가 240여개소 있는데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경영에 어려움과 생산품의 판로에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가 재활용품 처리와 직결된다는 판단아래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재활용사업자 육성보조금”을 총 88개업체에 16억9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씩 총 1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중에 있는데 장기적인 지원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원재원을 기금화 또는 특별회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우수 민간수집상에 대한 장려금 지원

서울시는 '98년도에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90%가까이 수집·처리하고 있는 영세한 민간수집상에게 재활용품 수거촉진과 적체해소를 위해 성과급 성격의 장려금 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에 자치구별 우수실적 민간수집상을 추천받아 11월에 시에서 대상업체 35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자가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자자금 1억원) 범위내에서 용자지원 받을 수 있는 것과 별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세 재활용품 수거·처리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고 하겠다.

(4) 「고철모으기 범시민운동」 추진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4분기중에 고철등 버려진 자원을 시민단체등이 앞장서 각종 이벤트 행사등을 통해 수집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1인 1캔 10개 모으기”, “우리아파트 폐품10톤 모으기”등의 목표를 세워 자치구 지역주민의 동참아래 이루어진 이 운동에 참여단체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1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운동의 추진기간동안 고철과 캔류의 수거실적은 작년 동기대비 7.7%가 증가되어 경기 침체하여서도 나름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는데 폐자원집중수거계획에 따라 금년말까지 이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나. 수요촉진 부문

수거한 재활용품은 집하·선별·압축·파쇄등의 중간처리과정과 재생제품 생산과정을 통해 판매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매단계 즉 수요과정이 수집·처리과정 이상으로 중요하다. 수요는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촉진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부문을 몇가지 소개하기 하도록 하겠다.

(1) 재활용센터 증설확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시민들의 근검·절약정신을 높이고, 자원재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형생활폐기물인 가전품과 가구류에 대한 재사용이 점차 늘고 있다.

시에서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하는 재활용센터에 대해 업체당 1,000만원씩을 무상보조해 있는데 현재 자치구별로 1개소씩 총 25개소가 운영중인 재활용센터를 금년말까지 5개소를 증설하고 2000년까지는 50개소로 확대토록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센터의 기능도 품목을 다양화하여 현재의 가전·가구만 취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류, 도서, 완구류등 생활용품을 추가해 나가고 재생제품 판매코너도 함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이미 6월말현재 27개소 재활용센터중에서 20개소에 설치한 재생제품 판매코너는 이용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대이상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품목별 가격표시를 게첩하고 가전·가구등에 대한 수리비 내역을 비치하여 고객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자치구별 재활용센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재활용센터 현황

(2) 「재활용제품 판매장」 확대 운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등에 의하면 백화점에는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백화점이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시외각 주택가 지역의 시민들이 재활용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편한 실정이다.

시외곽에 위치한 백화점의 재활용제품 판매량이 도심지역에 위치한 백화점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에 비치한 재활용제품과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상품에 대한 기호와도 상당

한 차이가 있는것 같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부터 기존의 재활용센터는 물론 신설하는 재활용센터에 대해 재활용 제품 판매장을 병설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6월 20일 현재 27개소 재활용센터중 20개소가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에서 중고 가전·가구류를 구매하려는 방문객들로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는 재활용촉진법등에 재활용센터내에서도 재활용상품 판매장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것이 재활용상품의 판로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재활용 센터의 이미지 개선과 이용자에게 혜택 부여

재활용센터는 가전·가구류를 무상수거하여 약간의 손질을 한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전·가구류를 배출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중고가전가구 수거시 보상품 주기운동」이 재활용센터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원절감, 소비감축, 물건재사용 실천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한 지역환경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생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녹색가계운동이 서울 YMCA주관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97년에 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을 무상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강동구 상일동 재활용센터내에서 대지 50평, 건물 50평규모의 「재활용품 종합전시판매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재활용품 전시관에서는 재생제품과 환경마크제품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고 홍보관에서는 쓰레기 처리과정 패널과 환경관련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한편, 초·중·고교생의 재생노트 사용확대를 위해 년차별 사용비율목표를 세워 놓고 시 교육청과 협조하여 재생노트 생산업체와 학교간에 공급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소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무총리훈령 제348호('97. 5. 1)에 의거 공공기관부터 재활용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확대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재활용제품 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조달품목중 구매의무화 품목이 지난 전자복사지등 사무용품 13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시산하 공직자에 대한 재생명함 사용운동을 지난 '97년부터 지속적으로 펼친결과 '97말 기준으로 명함 사용자중 70.7%가 재생명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를 100%로 세워 재생명함을 갖기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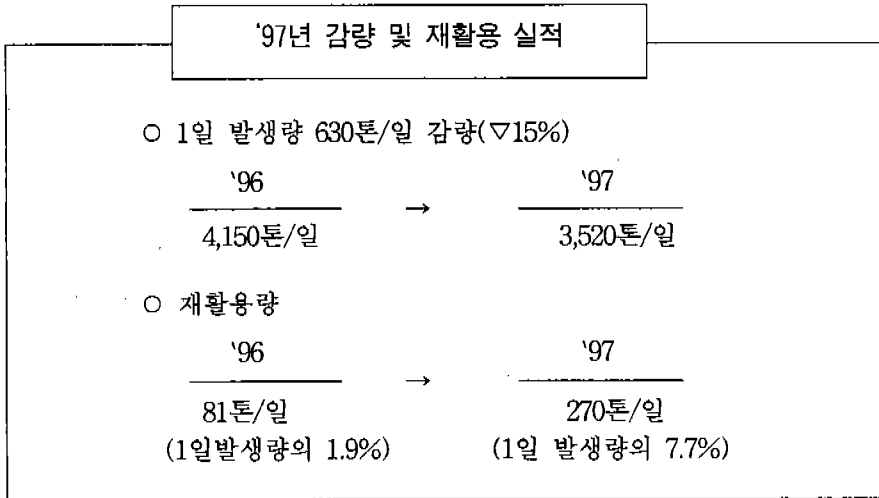
다음은 재난 '97년부터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실태를 소개하기로 한다.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생활쓰레기의 1/5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 매우 높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수집·운반시에 악취와 해충번식이 우려되고 매립 처리시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며 매립지의 불안정과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소각시에는 보조연료의 과다사용과 다이옥신 발생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 이전에 전체 곡물의 7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범시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등 자원재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원천감량하고 재활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97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시범사업을 전개하여 공동주택과 급식학교등에 246대의 고속발효기동 처리기기를 시범설치하여 1일 5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원천감량·처리하고 있다 또한 '98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단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97. 7. 1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8. 1. 1부터 객석면적 100m²이상의 음식점소와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호텔, 시장, 백화점, 대형점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업소로 지정되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자체 처리기

기를 설치하여 감량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98년상반기중 1,2차에 걸친 감량의무이행 지도점검을 실시한후 하반기부터는 감량의무를 이행치 않는 업소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의 건설을 적극추진하여 '96년 난지도 퇴비화시설(1일 10톤처리) 설치에 이어 '97년 강동구 퇴비화시설(1일 30톤처리) 설치, '98년에는 강남구 사료화시설(1일 40톤처리), 성북구 사료화시설(1일 20톤처리), 성동구 퇴비화시설(1일 50톤처리) 및 도봉구 사료화시설(1일 300톤 :광역시설)을 설치하는등 '99년까지 7개소를 설치추진하고 2005년까지는 1구1시설 또는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인근 축산농가등에 18개지역에서 1일 163톤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공급하고 있으며 더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각구청과 동사무소에 재활용 창구를 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처와 수요처를 연계·알선하여 주고 있다.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4대의 건조처리시설을 설치하여 1일 230톤의 농산물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성남등지 양계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산물쓰레기의 생산지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격포장 출하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 반찬 가지수와 량을 제공하는 좋은식단제를 보급하여 이를 실천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주는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자율배식을 실시토록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하여는 '98년중 식사시간대 이외에는 음식접대를 할수 없도록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주문을 전제로한 음식점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은행(Food Bank)을 '98년중 1개소 시범설치하여 남는 식품을 사회복지시설등에 공급·활용할수 있도록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환경시민단체 및 음식업 관련단체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50%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TV, 일간지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과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3. 결 론

서울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서도 “우리의 서울을 깨끗이 가꾸어 삶의 질 향상”에 기본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을

첫째, 쓰레기의 발생이전단계에서 부터 시민운동을 통해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둘째, 발생한 폐기물은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셋째,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은 현재 매립 위주에서 소각등 중간처리정책으로 전환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므로써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고 넷째,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과 환경친화적 시설물관리로 대시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기본방향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활용은 종량제 시행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95년 이래 급속하게 비중이 커진것이 사실이다. 특히 IMF경제시대이후 그동안 적체되었던 재활용품이 전반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철모으기 운동, 폐자원 집중수거운동등이 벌어진 정도로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를 재활용 수거·집하·선별·압축·파쇄등을 위한 집중시설투자를 위한 호기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어느정도의 지원만으로도 재활용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재활용에 대한 시설투자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두지 않는다면 조만간 재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종전보다 더 심각해 질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의 하나는 당초 신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에 규정하고 있는 으이무조차 제대로 준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제품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재질을 사용토록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설비개선에 따른 비용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실제 회수·처리하는 비용의 30%정도 이하의 예치금만 납부하고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치금 요율을 높여 실제 재활용품을 회수·처리하는 비용수준에 가깝게 하려고 하면 “제품가격의 양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고 물가가 오르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곤 한다

500ml용량의 PET 병 생산에 따른 예치금이 현재 개당 4원인데 10원 정도로만 인상한다면 회수·처리되어 재활용되는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게 될 것이다. PET 병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도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폐 PET 병 재활용을 위한 회수·처리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되도록 적은 예치금만 부담하고 실제로는 회수·처리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관계 중앙부처와 업계의 각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금도 재활용에 대하여 시각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나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재활용은 단순히 소요비용등 경제적 측면만으로도만 생각해

서는 안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를 포함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재활용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이기는 하나 투자비용을 감안한 선별적이고도 제한적인 재활용만이 옳은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환경관련 종사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환경을 한번 훼손하면 그것을 살리는 데에는 몇십배, 몇백배의 비용으로도 복구가 어려운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귀중한 유산임을 항시 유념하여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환경정책을 펴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감시자인 동시에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다.

